

## 국정운영기조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기만적 태도를 버리고 노·정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난 8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에 공공기관 노정위원회(이하 노정위)의 구성을 제안했다. 공대위가 제안한 8대 의제는 △단체협약 원상복귀·노동기본권 보장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노동이사제 조기 도입 △2019년 예산편성 집행지침 △경영평가 2단계 개선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노정협의 제도화 등이다.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 모습(10/11, 기재부 앞)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정위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9월 1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밝힌 이유는 2가지이다. 하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있으니 따로 노정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대위의 8대 의제 중 단체협약 원상복귀와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기관이 노정위 구성 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자리에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공운위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민간위원은 장관 및 차관급 공무원의 추천을 받은 인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기구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기획재정부는 공대위가 제안한 8대 의제에 대하여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가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될 것”이라는 국정운영기조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를 위한 기관인지, 잔존하는 적폐세력의 하수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이다.

이에 대하여 9월 19일 공대위는 청와대에 김동연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또한 10월 11일 ‘사회적 대화 쟁취,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 즉각 경질’을 요구하며 기획재정부 규탄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시작으로 공대위는 노정교섭 쟁취와 김동연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복지축소 원상회복과 임금피크제 폐기 등을 위한 노·정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 2018년 임금단체교섭 개최

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는 2018년 임금단체교섭 1차 회의를 10월 10일 개최했다. 임금 4.2% 인상과 부족인력 충원, 제도개선 등 요구안으로 진행되는 임금단체교섭은 발전노조와 중부노조가 공동 교섭단을 꾸려서 진행한다. 발전노조와 중부노조는 2016년부터 공동 교섭단을 구성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해고자 원직복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해결하라”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서 남동발전 사장에게 질타 이어져

10월 11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전회사의 해고자 원직복직과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해결하라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향렬 한국남동발전 사장에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남동발전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1.4%에 불과하다며 발전5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질타했다.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는 생**

**명·안전 업무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핑계로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질책하며 직접고용을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의 연료환경설비 없이 전기 생산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동사장은 **외주화 업무가 중단되면 발전사 정규직 업무도 돌아가지 않는다**며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정미의원은 현재 해고자 복직 관련 발전사 공동협의체 구성을 남동발전 사장만 거부한 상황이라며 **해고자 복직 관련 노·사·정 공동협의체 구성**과 아직도 발전현장에 7명의 해고노동자가 고통 받고 있는데 **‘노동존중사회’ 가치실현 차원에서 복직 시킬 것을 주문**하며 해고자 복직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서면 요구했다.

발전노조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과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도 국정감사에 맞춰 **발전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우리의 현안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하여 투쟁** 할 것이다.



▲ 국감이 열리는 고용노동부 앞 투쟁 모습(10/11)

## 현장 속으로... 발전노조 현장순회 진행 중!



발전노조 집행부는 현안사항 공유 및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기 위하여 현장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순회에서는 ‘직무급제, 해고자복직, 임금피크제,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조직화를 위한 토론을 했다.

### 일정

- 10/15(월)-17(수) : 발전노조 2018년 상반기 중앙회계감사 실시
- 10/18(목) :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와 에너지 민주주의 교육(16시, 삼척)
- 10/24(수) :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비상대표자회의
- 10/27(토) : 공공운수노조 집중투쟁(전국 동시다발 권역별 집회)
- 11/10(토)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